

2010년 예산안 분석(2)

글 : SERI 강성원 수석연구원

3. 2009~2013 국가재정운용계획

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대비한 추가적인 계획 필요

- 2009~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거 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세계경제 회복 지연에 대한 고려가 필요
- 2010~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과거 계획과 유사하며, 세계경제 성장률은 경제위기로 인한 기저효과를 고려하여, 1.1~1.4%p 높게 전망
- 2013년 균형재정 복귀를 계획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를 고려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으로 본 계획을 보완할 필요
 - 2011년부터 총수입이 연 7.9% 증가하고 총지출 증가는 연 4.7%로 억제되어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계획
 -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수입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

[국가재정 운용계획 전망 비교]

(단위 : %)

계획 연도	경제성장률(실질)	세계경제 성장률(실질)	재정수입 증가율(경상)	재정지출 증가율(경상)
2005~2009	4.9	3.3	7.2	6.3
2006~2010	4.8	3.4	7.1	6.4
2007~2011	4.9	3.5	7.4	6.9

[국가재정 운용계획 전망 비교(계속)]

(단위 : %)

계획 연도	경제성장률(실질)	세계경제 성장률(실질)	재정수입 증가율(경상)	재정지출 증가율(경상)
2008~2012	5.8	3.6	7.6	6.2
2009~2013	5.0	4.7	7.9	4.7

주: 계획 당해 연도를 제외한 4년간 성장률의 산술평균이며, 2009~2013 국가재정운용 계획은 성장률이 5%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 3년 평균값; 2008~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성장률은 구간으로 주어져서 구간의 중간값을 활용; 2008~2010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장률은 감세 및 규제완화 등 기업환경개선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정책적 효과를 반영하여 다소 높게 전망
 자료: 기획재정부, "국가재정운용계획", 각 연도.

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준칙 기능 필요

- 매년 기준 연도를 계획 수립 연도로 변경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작성하기 때문에 차기 연도 예산 준칙으로의 기능이 약화
- 총지출 규모에 대한 전망치는 실제 지출보다 작은 경향이 있으며, 시차가 클수록 오차가 확대
- 총수입 규모에 대한 전망치도 실제 수입보다 작은 경향이 있으나 오차가 지출 전망 오차의 21.4~56.0%에 불과

[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지출 및 수입 규모 전망 오차]

(단위 : 조 원)

	1년 전 계획	2년 전 계획	3년 전 계획
수입 전망 오차	0.5	-0.8	-1.6
지출 전망 오차	-0.8	-3.5	-7.3

주: 전망 오차는 전망한 규모에서 실제 규모를 뺀 값으로 0 이상이면 과대 전망, 0 이하이면 과소 전망을 의미. 2006~2008년 3년간 총지출 및 총수입을 대상으로 분석. 2009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전망 오차를 감안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
 자료: 기획재정부, "국가재정운용계획", 각 연도.

4. 재원 배분

시장기능 회복에 따라 경제지출은 축소되었으나 경직성 지출 증대

- 2010년 예산의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부문은 크게 삭감되어 총지출이 2009년 추경예산보다 축소되었

으나 보건·복지 부문이 증대되어 2009년 본예산보다는 증가

-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부문 지출은 추경예산 대비 6.4조 원 삭감되어 추경예산 대비 총지출 삭감 10.0조 원의 64%를 차지
 - 반면 추경예산 대비 복지부문 삭감액은 0.3조 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3.0%에 그침
- 복지부문 지출은 본예산 대비 6.4조 원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액인 7.3조 원의 87.7%를 차지

[2009년 예산 대비 2010년 예산 부문별 지출 증감액]

(단위: 조 원(%))

	본예산 대비 증감액	추경예산 대비 증감액
보건·복지	6.4(87.7)	-0.3(3.0)
R & D	1.3(17.8)	0.8(-8.0)
국 방	1.1(15.1)	0.5(-5.0)
일반공공행정	0.9(12.3)	-1.5(15.0)
공공질서·안전	0.6(8.2)	0.5(-5.0)
통일 외교	0.4(5.5)	0.4(-4.0)
농림수산식품	0.3(4.1)	-0.1(1.0)
환 경	0.3(4.1)	-0.3(3.0)
문화·체육·관광	0.2(2.7)	0.1(-1.0)
SOC	0.1(1.4)	-0.8(8.0)
교 육	-0.4(-5.5)	-1.4(14.0)
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	-1.8(-24.7)	-6.4(64.0)
총 지출	7.3(100.0)	-10.0(100.0)

주: 괄호 안은 부문별 증감액/총지출 증감액의 비율

자료: 기획재정부(2009. 9. 28). "민생안정·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·기금안 주요 내용". 보도자료; 기획재정부(2009. 3. 23). "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". 보도자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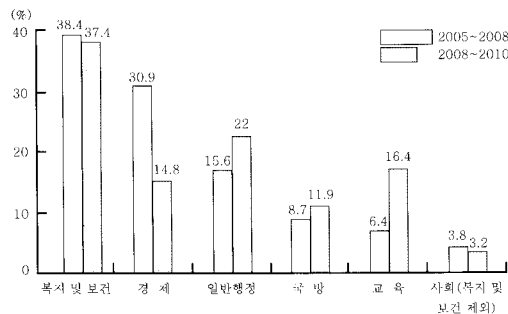
- 시장기능 회복에 따른 경제 지출의 신속적인 축소는 바람직하나 경직적인 예산지출 항목의 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
 -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완화되는 상황이므로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부문 지출을 이용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축소하는 것이 적절
 -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은행 대출금리 격차가 2008년 3/4분기 0.60%p에서 2009년 2/4분기 -0.07%p로 반전 될 정도로 신용경색 완화가 완연
 - 삭감이 어려운 연금지출이 지출 증대를 선도하여 지출의 경직성이 강화될 우려
 - 연금지출은 본예산 대비 2.3조 원 증가하여 복지지출 증가의 35.9%, 총 지출 증가의 31.5%를 차지
 - 연금지출은 수혜자들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정부의 지불 의무로 인식되어 관계법의 개정 이전에는 삭감이 어려운 지출 항목

5. 시사점

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균형재정 회복을 추구할 필요

-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규율 유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기간은 단축하되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려
 - 2년전 계획부터 오차가 확대된 경향을 감안하여 계획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전망의 책임성을 강화
 -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재량적으로 부과하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출한도 산정근거로 활용
 - 지출한도 산정 시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해당 연도 지출 계획을 반영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명문화
- 경제위기로 인해 확대된 재정지출은 경기 회복이 확인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준하여 질서 있게 조정 필요
 - 2009~2010년간 총지출 증가액 중 보건·복지지출 증가액이 38.4%, 경제지출 증가액이 30.9%를 차지하여 재정지출 증대를 주도
 - 2005년 이래 보건·복지지출의 증가 성향이 유지되면서 2008년 이후에는 경제지출 증가 성향이 새롭게 대두
 - 2005~2008년 3년간 지출 증가액 중 복지지출 증가액이 37.4%를 차지한 반면 경제부문 증가액은 14.8%에 그침
 - 경제위기로 경제 및 복지 지출이 확대된 경향이 있으므로 경제위기 회복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
 - 2009~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복지부문 지출은 연 6.8% 증가하는 반면 경제부문 지출 증가율은 연 1.3%로 억제될 계획

[총지출 증가액 대비 부문별 지출 증가액 비중]



주: 경제지출은 SOC,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, 농림수산식품, R&D의 합; 일반행정지출은 일반공공행정, 공공질서·안전, 통일·외교지출의 합; 보건 복지를 제외한 사회지출은 환경, 문화·체육·관광의 합

자료: 기획예산처(2005), "2005-2009 국가재정운용계획"; 기획재정부(2009, 9, 28), "민생안정·미래도약을 위한 2010년 예산·기금안 주요내용". 보도자료.